

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문재인정부 재정분권시책의 쟁점과 성공적 추진방향

재정분권은 문재인정부의 혁신, 포용, 공정의 국정 핵심 가치를 포함

- 재정분권은 국민주권시대의 혁신적 포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도구로서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고, 지역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과제임
- 출범 초기부터 관계부처,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정분권TF를 구성하여 재정분권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
 - 지방소비세율을 인상, 국가와 지방의 기능을 조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한편, 지방분권에 필요한 권한이양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, 2022년까지 지방세의 위상을 30%까지 높이는 2단계 재정분권도 구상하고 있음

▣ <표 1>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추진계획 ▣

구분	1단계			2단계	
	'19년	'20년	소계('19~'20년)		'21~'22년
			순증	누적	
지방세 확충	3.3조 지방소비세율 +4%p	5.1조* 지방소비세율 +6%p	8.4조	11.7조	12조+a*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
소방직 지원	0.3조 소방안전교부세율 +15%p	0.2조* 소방안전교부세율 +10%p	0.5조	0.8조	
기능이양	-	-3.5조 내외	-3.5조 내외		-
지방재정 순확충	2.9조	0.8조	3.7조	6.6조	-
국세:지방세	75:25	74:26	74:26		70:30

주: 2019년은 2019년 예산안, 2020년은 2018~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

출처: 정부합동 재정분권추진계획 보도자료(2018.10.30.)

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조치로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제한적임

- 15년의 역대정부의 재정분권은 일련의 세입분권 조치들이 자원중립원칙에 입각하였으며, 그 결과 지방세입의 확충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임
 -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1996년 22.7%에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의 영향으로 23.4% 소폭 상승하였으나, 이후에는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되지는 못함
 - 지방세의 위상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인 팽창이 이루어졌는데, 특히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설치나 규모확대가 증가됨
 - OECD 국가와 비교할 때,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은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근접하였으나,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와 연계하여 볼 때 과세자주권을 신장시켜 내실을 다지는 실질적 재정분권이 필요

▣ <표 2> 역대정부의 재정확충 효과 ▣

	재원확충	지방부담	지방세입
참여 정부	약 4.2조원 (+)	약 4.4조원 (-)	0.2조 감소
	•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황 (15%→19.24%, +4.2조원)	• 지방양여금 폐지 (-.4.4조)	
이명박 정부	약 2.3조원 (+)	약 0.9조원 (-)	1.4조 증가
	• 지방소비세 5%도입 (+2.3조)	•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(-0.44조) • 교육교부금 자연감소 (-0.46조)	
박근혜 정부	약 5.0조원 (+)	약 2.4조원 (-)	2.6조 증가
	• 지방소비세 6%p 확충 (+2.4조) •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(+1.1조) •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%p 인상 (+0.8조) • 분권교부세 3개사업 국고보조 환원 (+0.6조)	• 취득세 세율 인하 (-2.4조) • 무상보육 전 계층 확대 및 기초연금 등 일반복지 확대	

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-지방 간 재정분권을 강조, 광역-기초 지자체 간 재정분권 소홀

- 1단계 재정분권 시뮬레이션 결과, 수도권 광역지자체 위주의 지방세 확충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으나,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인상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상쇄에 따라 오히려 지방세입 규모가 줄어든 결과
 - (제약조건)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(약 3.6조원 규모)과 지방소비세 10%p 인상
 - 지방소비세는 광역시·도세이고, 국고보조사업의 부담은 기초 시·군·구인 점을 고려할 때, 실질적으로 다수 기초 시·군·구의 지방세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옴
 - 1단계 재정분권정책은 총량적 재정분권 접근(국세-지방세 7:3)에 기초한 정책설계로 실질적 광역-기초 지자체 간 지방세 세입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임

2단계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Two-Track 성공전략 방안

- 2단계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내에서 추진하는 전략과 제도를 개선하는 전략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필요함
- 형식적 재정분권 전략에서는 총량적으로 국세-지방세 7:3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,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국세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 소요 재원을 확보하되, 현행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구조개편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됨
- 실질적 재정분권 전략에서는 지자체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세의 선택과세 및 탄력세율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,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포함됨

▣ <그림 1> 2단계 재정분권 추진전략 ▣



▶ 본문보기 : 조기현·전성만(2019), 「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-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-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▶ 내용문의 : 전성만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033-769-9879, sungmanjun@krila.re.kr)

지난호 보기 : 저출산정책과 별도로 지역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촉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(박진경 연구위원)

원문보기 >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